

# ‘수직농장’ 농지로 규정… 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해 진다

## 규제혁신 과제 50개 확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시대 뒤떨어진 낡은 규제 혁파로 농정 3대 전환, 농촌 구조혁신 가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수직농장 규제완화, 예비청년농 대상 농기계 임대 등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15일 서울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조성된 수직농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라고 강조했다.

먼저 진입·입지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한다. 또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

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뒤 설치 가능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이 수직농장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新)산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알권리 보장 및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또는 정부24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휴대폰 앱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련해서는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외식업체 식재료 공

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걸림돌도 완화한다.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에 대해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에 농업인만 가능했던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또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가족개량·가족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를 비롯해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체코 원전, 금융특혜 아냐… 바라카 보다 사업비 높아”

〈UAE 원전 사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출신용기관, 기본적 룰 있어 한국도 타국과 같은조건 경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 금융지원 논란과 관련 “수출신용은 당연히 해야되는 역할인데, 이를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줘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무보가 작년에 제공한 수출신용이 245조원쯤 되고, 수출입은행이 약 77조원 정도 제공했는데, 그게 기반이 돼 역대 최대 무역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협약을 언급하며 “전세계 OECD 메이저 국가 수출신용기관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 룰이 만들어져있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신용기관들도 프랑스나 다른 나라 수출신용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했다. 국회 가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문서에도 써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문서 보여드렸다”며 “재무적이나 경제적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시했는데, 그런 문서를 들고와서 부

당한 금융지원이라고 하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을 ‘덤핑 수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덤핑으로 폄하할 일이 정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은) 바라카 원전사업비와 비교해도 체코에서 나온 예상 사업비는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원전이 덤핑수주라면) 삼성이나 LG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순

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세안과)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아시아는 경제 전체로 보면 우리 무역 투자의 두번째 카운터파트너다. 중미 사이에 끼이고, 공급망이나 에너지 분야, 에너지안보 정책을 보면 시장이 커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전략 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필리핀과 체결한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MOU에 대해선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설비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한수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바탄원전 참여에 대한)경제성 등이 나오면 필리핀 정부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가지 단계에 걸쳐 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지금 실무진에서 인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

## 9.15.~12.14.



QR코드 스캔

· 부정수급 · 불법 브로커 ·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회피 ·

24시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 1551-5777

